

“광주 5개 자치구 기능·권한 확대해야 불균형 해소”

‘균형 방안 토론회’서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위원 주장
“그대로 두면 재정격차 갈수록 확대...제도 개선해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된 기존 광주광역시 5개구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자치구로서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이에 걸맞게 재정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은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주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특별시 출범은 서로 다른 지방행정체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한 우리나라 최초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광역시 산하 5개 자치구들이 전라남도 산하 시·군들과 함께 ‘이원적·대칭적 재정관계’에서 ‘통합시·시·군·자치구로’ ‘일원적·비대칭적 재정관계’로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구조에도 자치구는 등 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2개 세목을 가진 반면 시군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

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5개 세목을 가져 자체수입 규모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됐다. 지난 2024년 결산 기준 5개 자치구의 평균 자체 수입은 22개 시·군 평균보다 약 3배 정도 낮은 수준이다.

또 자치와 시군은 조정교부금에서도 재원 체계, 산정 구조, 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직접 받지만 자치구는 특별시가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탓에 재정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시군의 보통교부세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자치구와 시군의 총 세출 규모는 약 1.5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며, 주민 1인당 금액도 약 2~5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 레지옹과 경남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 사례를 들어 “권한과 재정의 실질적 재배분이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관련 제도는 현재의 비대칭적 재정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와 이전재원 측면에서 모두 불리한 위치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그대로 두면 특별시 내 자치구와 시군 간 재정격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정·권한의 불균형 해소를 위

해 홍 연구위원은 자치구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거나 자치구를 일반 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 연구위원은 특히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을 위해 특별법 11조에 자치구에 대한 교통교부세 산정 특례를 신설하고 3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 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참여한 구균철

경기도 교수는 “현재 도농복합시에 통합된 자치구와 군 사이에도 불균형은 존재한다”며 “우선 특별시 내 자치구의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간이 이뤄진 다음에 재정 보전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태 시군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을 정부가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별법 17조에 초광역 사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무의 이양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지방경제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사무의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광역행정체제에 맞겨진 6개 분야 14개 대도시 행정 사무에 대해 자치구가 수행할 역할을 우선 정한 뒤, 이에 걸맞게 자체 수입 세목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주 당권 주자들, 텃밭 호남 민심잡기 ‘사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김민석 후보가 텃밭인 전남광주를 찾아 표심 공략에 사활전을 펼치고 있다. 권리당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에서 승기가 전당대회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계산 아래 민심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송영길 후보는 이날 해남과 진도, 광주 등을 방문하는 호남 일정을 수행했다.

전남 서부권을 찾은 그는 해남종합병원과 5일장, 산이정원, 우수영 관광지, 세월호 팽목기억관을 방문해 현안을 청취하며 당대표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이 치러진 울돌목에 찾아 “열두 척의 배 같은 지지율이 있다”며 “수의 싸움이 아닌 물길에 나는 자의 싸움이었던 명랑대첩처럼 울돌목의 역전, 저 송영길이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꼭창 호남이 조선을 지켰듯 호남의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며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 힘, 호남이 정치의 중심으로 서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송 후보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찾아서도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연내 처리할 것과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을 약속했다.

아울러 “호남의 경제는 호남의 정치가 바로 설 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며 “호남의 정통을 세울 송영길에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남 일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6일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찾아 현황을 살피고 있다.

송영길·김민석 후보 등 연일 전남광주 찾아 지지 호소
정청래, 수도권서 호남향우회와 만나 호남발전 등 약속

김민석 후보도 호남 일정을 소화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후 전남광주 동부권을 찾은 김 후보는 지역 광역의원과 간담회를 가진 뒤 순천대학교 우석출에서 강연을 펼쳤다.

강연에서 김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당 지지율을 10% 이상 끌어올려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며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열심히 일해서 당을 끌고 갔다면 이제는 당이 지지율을 올려 정부를 뒷받치고 일하게 하는 당으로 바뀌어야겠다”고 강조했다.

경선 관세에 대한 소견도 내놔. 총청과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 선방한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인천과 강원, 대구, 경북, 제주에서도 최소한 비겨오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호남에서 크게 이겨 승리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6일 순천대 우석출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가서 끝낼 수 있다”며 “아곳(호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힘 있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당대표의 역할로 선거 지휘와 공천 혁신,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 중앙정부가 놓칠 수 있는 지역 현안 해결을 제시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며 “당선된 사람이 4년 동안 민주당의 강령과 정책에 맞게 정책을 집행했는지를 보고 4년 후 공천 점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달려가는데 입법을 붙잡고 있으면 되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속도감을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일주일에 이들은 지방에서 상주하겠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6일 경기도 호남향우회와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다”며 “여수와 광양은 산단을 살려야 하고, 순천은 의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지역 의원들과 함께 촘촘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청래 후보는 수도권 일정을 소화하면서 호남향우회 경기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호남 민심을 간접적으로 살폈다.

정 후보는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남광주와 전북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살피며 예산 확보까지 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호남 발전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남분들의 바람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대표가 되면 혹시 매가 프로젝트에 차질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호남 사위로서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를 출시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광주를 AI·반도체 교육도시로”

김영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호남 도약 강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영호 후보(사진)가 6일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할 책임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최대 인공지능(AI)·반도체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의 일원이 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호남의 도약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지역 한국폴리텍대학을 AI·반도체 사관학교로 전환하고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호남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좋은 일자리를 얻는 청년의 도시를 완성하겠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당 내 전담 기구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는 “경쟁을 넘어선 대립과 갈등을 바라보며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고 집권여당의



김영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호남 도약 강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 순회경선에서의 반전조

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를 가리켜 박쥐라고 지칭한 최민희 후보가 유튜브를 통해 사과를 했으나 그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이대로라면 민주당 공동체가 깨진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을 동물로 평가하는 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영호 후보는 “전남광주 특별시민들

께 통합의 리더십이 있는 지도부를 구성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지금 이대로 지도부가 확정돼 매주 최고위가 운영될 경우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 리더십이 있는 최고위원을 반드시 선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광주시’ 명칭 사용 자제해주세요”

법정 명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통합 자치단체의 공식 명칭 정착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법으로 정한 명칭과 약칭이 있지만, 출범 초기 각종 표기 과정에서 비공식 표현이 사용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통합특별시 명칭과 관련해 공식 표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통합특별시의 법정 명칭과 약칭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대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칭은 ‘광주

특별시’로 정했다.

하지만 통합 출범 이후 일부에서는 ‘전남광주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을 결합한 이름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표현이지만, 법률상 정해진 명칭은 아니다.

행정 명칭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새롭게 출범한 상황에서 공식 명칭은 통합 도시의 정체성과 대외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발생하는 명칭 혼선을 줄이기 위해 최근 언론과 관계기관 등에 공식 명칭 사용을 안내했다. 정식 명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법정 약칭인 ‘광주특별시’를 사용해 달라라는 취지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정청래 ‘깨시민 간다’ 포스터...“호남 비하” 논란

송영길·조계원 “호남이 꼭두각시라고?” 잇단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자신의 SNS에 ‘응답하라 호남’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공유한 데 대해 “호남을 비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자신을 지지하는 이른바 ‘열정 짝(알았어 정청래 짝들께) 원정대’의 홍보물을 공유했다.

이 홍보물에는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영남의 깨시민(깨어있는 시민)들이 호남으로 간다”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이 영남의 깨시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러 간다”는 글이 실렸다.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 민주당의 역사를 함께해 온 한 사람으로서, 분노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어 “호남 시민들은 아직도 누군가의 가르침과 계몽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냐?”라며 “호남 당원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냐? 지역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자들이 꼭두각시라는 말이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경선에 출마한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은 “정 후보는 그동안 전복소외론을 앞세워 호남 내부를 분열시키고, 내란 위기를 함께 극복한 동료 의원들까지 적대시하더니 이제는 영호남 갈라치기까지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당대표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